

더 가까이, 충주

제2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2025. 2. 4. ~ 2. 11.

-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충 주 시 의 회
전 문 위 원 실

차 례

- ① 충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 ②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 ③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 총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5년 1월 20일 이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90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총주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 범위(안 제3조)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5. 1. 6. ~ 1. 16. (의견 없음)
- 규제심사: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충주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출이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한정) 등임.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먼저, 금번 개정 내용인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의용소방대의 운영비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고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그러나,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 및 교육이 의용소방대원이 수행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¹⁾이 있어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활동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1) 법제처 의견 17-0083, 17-0092, 23-0195 참조

- 다음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살펴보면
-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해당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²⁾,
- 법제처 또한 같은 취지로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및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
1. 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하수 개발비 등을 지원(인천광역시 중구)
2. 무료 환승제도에 따른 버스운송업체 운영 손실액 보조 지원(청주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1.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장학기금출연조례안(인천광역시)
2. 서울시 시우회, 서울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서울특별시)

2) 대법원 2012추176

- 결국 사업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주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충주시의 경우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 시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 사업 목적 외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낭비·불합리한 요인이 없는 사업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함.

■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 대상 사업)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제4호에 의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를 우선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
4. 사업 목적 외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낭비·불합리한 요인이 없는 사업

-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연수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비 등을 청취한 뒤 해당 사업이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지,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인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인지, 사업 목적 외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낭비·불합리한 요인이 없는지 등을 고려한 신중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 됨.

② **충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5년 1월 20일 고민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90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보조금의 지원 (안 제3조)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및 준용(안 제4조 및 제5조)
- 포상 (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5. 1. 7. ~ 1. 16. (의견 없음)
- 규제심사: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음.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근거가 있으므로 가능하다 할 것임.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그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4조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조금 신청방법과 및 실적보고 등의 정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가 규정되어 있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보조사업 실적 보고 등은 조례 제정이 가능함.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의견

-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정한 인간됨을 위한 범국민정신 운동으로,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 운명체로서의 국민화합을 이루며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은 바르게살기운동의 확산과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 충주시는 이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2025년 본예산에 안전문화 캠페인, 기초질서지킴이 활동 지원, 시협의회, 읍면동 협의회 운영에 대한 민간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협의회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과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3.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5년 1월 20일 홍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90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추가 증원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정수(안 제2조)
 - (현안) 3명 이상 6명 이내 → (개정) 3명 이상 10명 이내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5. 1. 7. ~ 1. 16. (의견 없음)
- 규제심사: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충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증원하여 보다 정확한 결산검사와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것임.
- ‘21.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군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시·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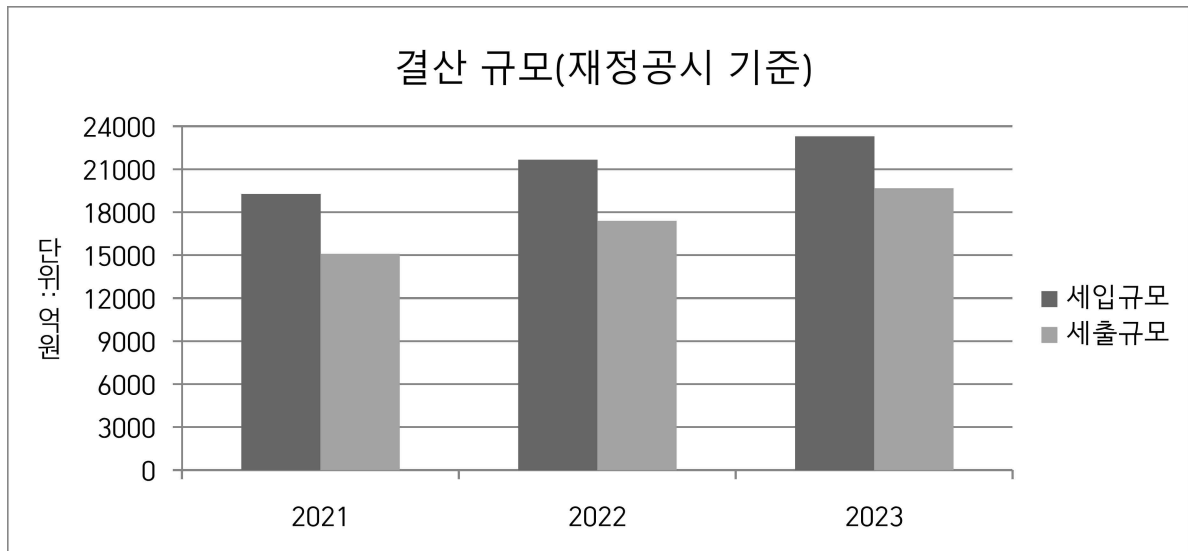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충주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2. 10. 결산 검사 강화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로 개정할 이력이 있음.

- 충주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2년 결산기준 세입규모는 21,666억원, 세출규모는 17,395억원이며 2023년 결산기준 세입규모는 23,264억원, 세출규모는 19,683억원으로 해가 지날수록 결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정방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며 선정 정수의 범위가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고 충주시의 결산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수의 자율재량을 부여하고 보다 신뢰있는 결산 검사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 됨.